



“과학자도 사회의 구성원... 성찰적 자세로 시대 이끌 질문 던져야”

박범순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

우리나라는 GDP 대비 R&D 투자 비중 세계 1위, 투자 규모 세계 6위를 자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구개발 혁신에 대한 갈증, 그리고 매해 가을 노벨상 수상의 열망과 좌절도 반복되고 있다. 그 중심에는 국내 과학기술계의 ‘아킬레스건’과도 같은 기초과학에 대한 고민이 있다. 박영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은 이 같은 고민을 나누고자 최근 <사회 속의 기초과학>을 출간한 박범순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를 만났다.

박범순 교수는 서울대학교 화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에서 과학사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이후 미국 국립보건원(NIH)에서 생명과학과 의학 정책을 연구했다. 현재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과학제도와 기관, 과학기술과 법, 20세기 과학사와 의학사를 연구하고 있다.



책 출간을 축하드린다. 저도 개인적으로 기초과학인 물리학을 전공한 연구자 출신이기도 하고, 기초과학연구원(이하 IBS)과 관련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법이 통과될 때도 국회의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 책이 참 의미있다고 생각했다. 기초과학이라는 분야가 사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상당히 먼 얘기였다. 그럼에도 우리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성숙해지면서 기초과학이 사회 발전 과정과 그 맥락 속에서 추구해야 할 여러 가지 가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었던 것 같다. 어떻게 이 책을 쓰시게 됐나.

사실 IBS에서 먼저 연락이 왔다. 지난 봄에 IBS가 개원 5주년을 맞이하여 그 역사를 정리해보고 싶다고 했다. 제가 과학사를 연구했고 특히 미국 국립보건원(NIH)의 역사도 연구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보시고 연락하신 것 같았다.

보통 기관 역사 정리는 수십 년된 기관에서 기념 삼아 많이 하지 않나. 5년차인 IBS가 그런 기획을 했다니 의미있는 시도가 아닌가.

맞다. 제가 해당 과제를 하면서 좋다고 느꼈던 부분이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IBS 역사가 굉장히 짧은데 이런 작업을 하려는 게 신선했다. 보통 많은 기관들이 10주년, 20주년

이런 단위로 이런 일들을 하고, 대부분 자축의 개념에서 끝나서, 화제거리 중심의 일들을 정리하는데 그친다. 그게 아니면 백서형태로 재미없는 책들이 나오게 된다. 두 번째로는 이런 작업을 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급박하게 일을 추진해 아쉬운 결과물을 내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IBS는 1년 반 전에 계획하고 작업한 게 상당히 좋았다. 일을 시작하면서 IBS측에 단순히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보다는 학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연구를 통해 책을 출판해 널리 읽히도록 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 그래서 이 책이 나오게 된 거다. 사실 과제 마치고 나서 책 형태로 작업하는 데 추가적으로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다.

5년밖에 안 된 IBS가 1년 전부터 그런 기획을 준비했다는 사실이 참 의미 있는 것 같다. 따지고 보면 IBS도 태동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꽤 긴 시간이었으니 다른 기관의 5주년과는 다른 의미가 있었을 것 같다. 책을 쓰시면서 IBS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기초 과학 연구 생태계에 대한 부분, 부족한 점과 지향해야 할 점 등에 대해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사실 생태계를 평가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규모 면에서 봤을 때는 80년대, 90년대에 비해 상당히 커진 것은 사실이다. 사이즈도 커졌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연구자들도 많아졌다. 그



런데 그것과 함께 얼마나 이 생태계가 성숙했나라는 측면에서 여러 면에서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여기서 ‘생태계’라는 단어는 조금 의도를 가지고 쓴 단어다. R&D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흔히 시스템이라는 말을 쓰는데, 시스템이라는 개념은 상당히 공학적인 접근이다. 무엇을 디자인 하고, 최적화(optimization)해서 여러 가지 요소가 잘 돌아가게 하는 개념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투입한다는 의미도 있다. 이에 비해 생태계라는 건 생물학적인, 또는 물질적인 개념도 있다. 바로 ‘자정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처음엔 어떤 충격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생태계가 성숙하고 잘 돌아가면, 자정능력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런 걸 어떤 부분에서는 회복 탄력성(resilience),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으로도 이야기 할 수 있겠다. 한국의 기초과학 생태계가 규모는 커졌지만 조금 더 성숙하려면 그런 좋은 생태계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갖춰야 하지 않을까 싶었다.

그런 맥락에서 IBS의 설립이 어떤 계기가 되길 바랐었다. 과거에는 국가 지도자가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깊게 인식하고 많이 리드해오지 않았다. 그러다 그 국가주도 프레임이 한계에 도달했다. 우리나라의 발전단계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기초과학의 중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그리고 그 중요성에서 착안해 과학자들이

“정부 주도의 기초과학 발전은 목적지향적이고 중앙 집중적이다. 자율과 창의의 확보, 기초 연구 목적에 대한 근원적 질문이 남는다.”

처음으로, 어떤 ‘과학 도시’를 상상하며 거대한 프로젝트를 정치권에 던져서 실현된 것이 바로 IBS다.

기존에 기초과학을 위한 담론이라면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기초과학이 가장 컸고, 90년대 김영삼 정권 들어 노벨상 담론도 나오기 시작했다. 이후 국격 이야기가 나오면서 고등과학원도 만들어졌다. 그런데 IBS의 태동은 매우 달랐다. ‘새로운 도시를 만들자’, ‘과학자 공동체를 만들자’는 지향점을 두고 일을 시작했던 것이다. 상당히 창의적이었다. “가속기나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닌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겠다’, ‘과학도시 모델을 만들겠다’는 시각이었다. 정치권에 손을 내밀면서도 정말 최고 권력자에 손을 내민 것 아닌가. 그래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결실이 나온 것 같다.

IBS가 탄생하면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도 기초과학 담론이 진행된 것 같다. 지난 90년대 이후에 GDP도 크게 성장했고, R&D 투자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정부도 그렇고 기업들도 성장하면서 투자를 늘린 것이다. 그런데 이게 옳은 방향으로 투자되고 있는지는 늘 논란거리다. 최근에는 출연연 혁신방안 공청회도 있었다. 사실 연구가 잘 되려면 ‘자율성과 창의성’ 확보가 핵심이라고 보는데, 정부 주도의 기초과학 발전은 목적 지향적이고 중앙집중적인 기획에 따라 흘러가게 마련이다. 또 정부와 출연연 간, 정부와 연구자 간에 자율과 창의가 확보될 수 있는가도 늘 문제다. 결국 기초과학의 연구 목적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이 남는다.

굉장히 복잡하지만 중요한 문제다. 기초과학을 하나의 투자로 본다면, 그 투자 가치를 따져야 하지 않나. 그런데 기초과학은 어

“기초 과학자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를 크게 보면 좋겠다. 자신의 영역에 충실하되 사회에 대해 성찰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떤 성과를 쉽게 보기 어려운 투자의 형태다. 기초과학 연구를 잘 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많이 지원해 왔다는 미국조차도, 50~60년대부터 했고, 이후에 회의론도 대두되고, 대규모 예산 삭감도 있었고, 그러다 다시 시작되기도 했다. 어떤 사람은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 지원을 ‘보험’으로 비유한다. ‘프로젝트’라기보다 이걸 지금 해두는 게 좋다는 개념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초과학 분야의 R&D를 기획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안 할 수는 없고, 한국같이 자원이 한정된 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전략적이라는 단어가 정치적, 지역 배분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혜를 모아야 할 것 같다.

예를 들자면.

제가 있었던 NIH의 임무를 보면, 가장 큰 임무가 ‘국민의 보건을 증진한다’는 아주 간단한 내용이다. 그리고 그 방법의 일환으로써 기초과학을 지원한다. 기초과학에서는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Breakthrough가 나올지 모르니, 가능성이 있는 분야는 기관 차원에서 계속 모니터링한다. 그리고 가능성이 보이는 분야는 지원하고 직접 해보기도 한다. 기초과학 측면에서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기획하고 나눠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은 기다리고 관찰하면서 과학자들에게 자율성을 주고, 무언갈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

같은 맥락에서 기초과학이라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만 개 중에 한두 개가 성공할 수 있는 분야인 만큼, 연구 성과가



사회 변혁의 모멘텀이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연구로만 남았을 때 국가 경제나 산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런 논란은 뫼비우스의 띠와 같다. 그래서 어쩌면 당시 이명박 후보도 과학만으로는 국민을 설득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 여러 지역에 대한 ‘벨트’라는 단어, 또 비즈니스 개념까지 넣어 복잡한 명칭을 만들었던 것도 같다.

정확히 보셨다. 저는 해당 명명은 좀 아쉬운 선택이었다고 본다. 국민들에게 여러 요소들을 알리기 위해 어쩔 수 없었겠지만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혼동을 줬다. 당시 나왔던 많은 사설이나 언론 기사에서도 기초과학과 비즈니스의 연결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벨트의 개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부는 어찌 보면 국민의 세금으로 사업하는 기관이다. 그렇다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다. 물론 과학이 중요하고 과학자가 중요하지만, 국민이 직접 느낄 수 있는 것에 대해 고민했을 거란 이야기다.

해외 상황은 어떤가.

해외도 유사하다, 미국을 보더라도, 1945년 발간돼 미국 국가과학재단(NSF)의 토대가 된 바네버 부시의 보고서 ‘Science : The Endless Frontier’의 서문에 보면 유사한 이야기가 나온

다. 정부가 기초과학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세 가지를 드는데, 첫 번째가 보건·질병과의 싸움, 두 번째가 국방·안보, 세 번째가 경제·일자리 창출이다. 물론 이후에 NSF는 순수한 기초과학만 다루게 됐고 보건 분야는 NIH가, 국방 분야는 방산기업들이 다루게 됐는데, 의의는 기초과학 지원을 위해 정부에 호소하는 방법으로서 기초과학이 가져올 여러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점이다.

맞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방 분야에서 기초과학 분야에 많이 지원했다. 과학계에서 이 부분을 놓고도 늘 여러 입장이 있다. 그렇다. 국방부는 물론이고 국립보건원에서도 그 분야에 관련된 기초과학 지원을 많이 했다. 그리고 그때마다 과학자들의 입장은 지금과 유사했다. 국방부의 지원을 받은 기초과학 연구라면 결국 무기개발 아니냐는 도덕적 고민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궁극적으로 기초과학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고도 했다. 앞서 말씀하신 ‘되비우스의 띠’가 정확한 표현이다. 기초과학 진흥의 수단 일수도, 종속되는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일부 과학자 학자들 중에서 20~30년 이후에 그 효과를 연구한 사람들이 있다. 상당히 논쟁적인 문제지만 과거 군사 목적으로 지원했던 양자전기역학 등이 물리학의 발전에 왜곡을 가져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덕분에 순수과학의 파이가 커졌다고 말하기도 한다. 미국 보건 분야의 경우를 보면, 2차 대전 이후로 많은 투자가 진행됐다. 그 과정에서 의대를 중심으로 정부가 연구 방향을 정하는 것에 대한 반감을 많이 드러냈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방향을 수용했는데, 그 이유가 중요하다.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연구 방향은 바뀔 수 있지만, 그것도 결국엔 질병을 치료하고 더 좋은 보건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목적을 가진 예산 투자여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었던 것이다.

결국 과학기술이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고민과 그 결정이었다고 본다. 책의 제목과도 일맥상통하는 느낌이다. 사실 저 또한 과거 기초과학을 전공한 이유는 자연의 진리를 탐구한다는 매력 때문이었었는데 여러 일을 하면서 사회적 역할과 책무를 깊게 고민하게 됐다. 그래서 KISTEP 원장으로 일하면서도 점차 심각해지는 사회 격차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삶의 질과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과학기술이 나아갈 방향을 다루려고 노력해왔다. 이 책을

통해 특별히 기초과학이 사회에서 해야 할 역할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셨다면.

다른 과학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기초과학자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를 크게 보면 좋겠다. 과학자 사회에는 그 나름대로의 행동 방식과 평가 프레임이 있다. 좋은 부분도 많다. 그러나 그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 사회 또한 더 큰 사회의 일부여서다. 과거에는 과학 분야의 스케일이 크지 않아서 그 안에서만 결과물이 나와도 괜찮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고 더 넓은 사회와의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가 아무리 호기심 해결을 추구하는 연구를 해도 이미 사회와의 관계가 형성된 지금은 18세기의 과학과는 상황이 매우 다르다. 과학자 혼자 기초과학도 하고, 사회에 유용한 일들도 따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자신의 영역에 충실하되, 자신의 포지션이 큰 사회에 속했다는 것에 대해 늘 성찰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제안도 나올 수 있고, 이 시대에는 못 해도 다음 세대에 새로운 질문을 던져줄 수도 있다. 그런 고민이 계속 지속돼야 한다.

과학자로서 자기 분야에도 충실하면서, 여러 연결된 사회 문제를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다. 대내외적으로 격변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금 상당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다. 4차 산업혁명과 기후 변화 문제, 인구 문제, 자원 문제 등 복합적인 이슈가 대두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과학기술자와 일반인, 위정자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역할 분담이 어떻게 돼야 한다고 보시는지.

그렇다. 4차 산업혁명이 최근 화두다. 그런데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혁명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잘 느끼지 못한다. 지나고 나서야 그게 그렇게 큰 변화였는지 알게 된다. 정치적인 변화도 그렇고, 기술적인 변화도 그렇다. 물론 예측하기 어렵고 우려되는 부분이 많지만 한편 너무 그것만을 신경 쓰고 대비하면 놓치는 것도 많을 것이다. 여러 사회 문제는 과거의 방식으로 접근해 해결할 문제들이 여전히 많다. 물론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날 조짐을 감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술 개발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민간과 대학과 출연연이 역할을 분담해 이런 기술들의 사회적 수용성과 효용성을 같이 고민해야 한다. 정부가 모든 것을 해나가는 건 위험 부담이 크다. 작은 단위로 나



눠서 테스트베드를 활용하는 형태도 좋지 않을까 싶다.

또 기초과학 이야기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사람, 인력 문제다. 최근 기초과학 인력과 관련해 가장 이슈가 된 내용이 이공계 병역 특례 문제였다. 소위 사농공상 지배 질서 속에 있던 한국사회를 60년대 이후에 혁파할 당시 우수 인력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됐다. 그 중심이 이공계 인력이었다. 그렇다보니 과거에 병역 혜택 등을 제공했는데, 축소되는 상황이지 않나. 교수님께서도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 의과대학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 병역 특례 제도가 임상관련 기초 연구를 발전시키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를 발표하셨다고 들었다. 국내 이공계의 병역 문제는 어떻게 보시나.

미국 생명과학계에서 임상과 기초 분야가 함께 발전한 계기가 그 역사적 맥락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대 출신과 자연계 출신 간의 벽이 상당히 높지 않나. 미국의 경우 50년대 말부터 70년대 초까지 베트남 전쟁 당시 징병제도가 있었는데, 당시 NIH에서 Clinical center를 크게 만들면서 임상 실험을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 의학박사들이 NIH에 의무복무 형태로 대거 유입됐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기초과학자들과 연구도 함께 했고, 그들 사이에서 노벨상도 많이 배출했다. 이 병역 혜택이 베트남 전쟁 끝나고 사라졌는데, 비슷한 제도를 만들어도 그때만큼 중

은 인력이 유입되는 효과를 보기 어려웠다. 국내 경우도 마찬가지다. KAIST가 1971년 개교했는데, 한국처럼 위계질서가 강한 사회에서 단기간에 톱 클래스의 대학으로 성장한 건 병역특례를 바탕으로 좋은 학생들이 많이 유입돼서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혜택이 여러 대학에 퍼지면서 집중된 효과보단 폭넓은 이점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이 이를 당연하게 여기는 풍토도 조성된 부분이 있다. 우리나라가 휴전 중이고, 특수한 상황이 있지만 제도를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한시적인 제도여야 하는 데는 동의한다. 2020년일지, 2030년일지는 몰라도 언젠간 축소될 제도인 만큼 학생과 연구자들이 고민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인력 문제도 있다. 최근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유학 마친 학생들의 국내 복귀도 약간 기대가 된다. 우리 국적 학생들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다양한 국적의 우수 인력도 마찬가지다. 그런 상황으로 보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처음 만들던 당시 외국인의 편리하고 풍성한 정주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던 목적이 지금 많이 퇴색된 것 같다. 그런 면에서 IBS에 외국인 연구자가 꽤 있는 걸로 아는데, 들어와서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지 살펴보셨나. 오키나와에 위치한 OIST가 영어 기반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시행착오 끝에 영어를 원활히 쓰게 된

싱가포르나, 싱가포르를 따라가고 있는 말레이시아의 성장세를 보면 언어부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다.

사실 OIST나 싱가포르처럼 영어를 원활히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점에선 원론적으로는 동의한다. 그런데 KAIST의 경우, 과거 서남표 총장님 재직 시절 영어 교육을 상당히 강조하셨는데 수업과 연구실 미팅 등에 언어를 이중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생기는 문제도 더러 있었다. IBS도 국제 행사를 개최하는 등 업무에선 언어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게 맞겠지만, 다른 나라의 상황을 그대로 답습하기엔 무리가 있지 않나 싶다. 최소한 ‘IBS가 너무 좋은데 언어 문제가 힘들어서 떠나겠다’는 말은 안 나오게 해야 한다. 인력 문제의 경우에는 여전히 논쟁적인 부분이 있다. 국내 연구자들이 그렇지 않아도 연구비가 빠듯한데 외국인 파이를 두는 게 옳은 일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IBS 내부에서는 격을 높이려면 훌륭한 외국인 연구자가 많이 들어와야 한다는 목적의식이 확고하다. 하지만 10%? 30%? 50%? 이렇게 비율을 정하는 건 어렵다. 제 생각은 역시 생태계의 관점에서, 한 창구는 한국 과학자들의 생태계가 있지만 전세계 과학자의 생태계도 있지 않나. 그 생태계가 잘 돌아가고 건강하려면 외국에서도 오고 싶어 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벽을 벗어던지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역시 비율을 정하는 건 어려운 문제다.

이런 IBS가 연구실 개방이나 몇 가지 행사 개최를 통해 사회와 소통하려는 점 또한 인상 깊다. 사실 저희 기관도 그렇고, 많은 출연연구기관들이 유사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0~20년동안 학생들이 교육 현장에서 과학과 상당히 멀어진 요즘, 국내 과학기술계의 성과 확산이나 소통 방법이 여전히 캠프나 행사 개최, 대중서발간에 그치는 건 아쉬운 일이다. 어떤 부분을 더 노력해야 할까.

여러 가지 기획이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에게 연구실을 개방하거나, 행사 등을 많이 개최한다. 그런데 때로는 행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힘든데 다소 소모적이라는 느낌이 든다. 행사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어떤 느낌을 가질지 잘 모르겠다. 어떤 영감을 받아 인생을 바꿀 만한지, 단순히 수행평가나 과제인지. 많은 경우에 안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정도라면 상당히 체고해야 한다. 저는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이 과학기술계에서 너

무나 답다운 형식으로 대중을 대해서라고 본다. 전문가들도 어린 이들에게 배울 수 있는 게 있다. 시민, 인문학자들로부터 배울 수도 있다. 열린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답다운 형식의 행사 위주 프로젝트는 지양했으면 좋겠다. 어려운 것을 쉽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왜곡 요소도 많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는 게 가치 있다는 걸 인식시켜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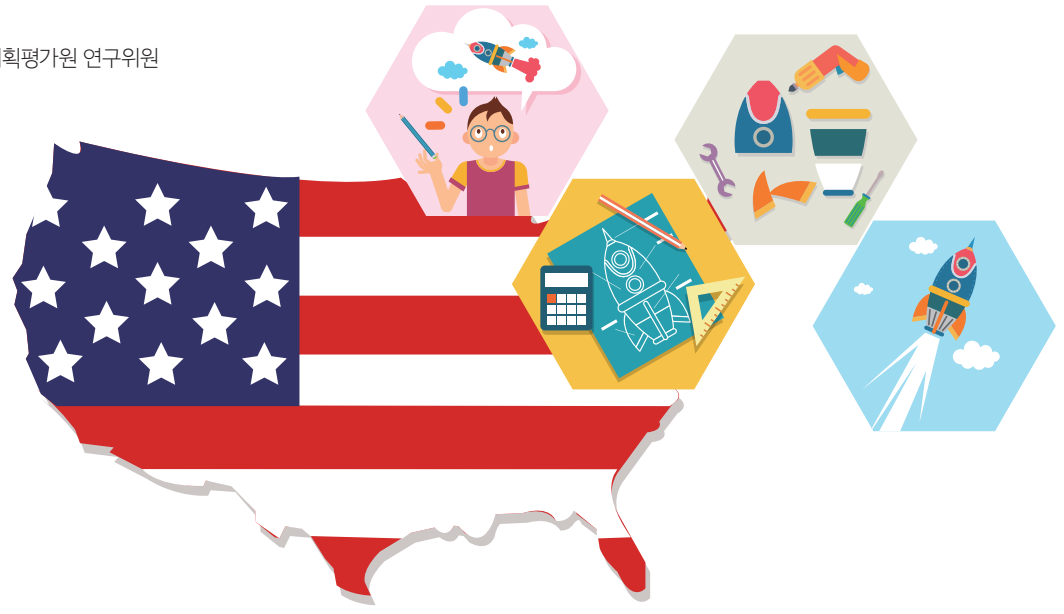
KISTEP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우리 기관도 국가 과학기술과 미래에 대해 더 많은, 전략적인 일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저희 기관에 조언이나 바라시는 바가 있다면.

과학기술을 조금 넓게 접목하시면 좋겠다. R&D만 생각하면 놓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 저희 대학원에 정근모 전 장관님이 초빙 석좌교수로 계시는데, 과거 과기처 시절의 장점들을 말씀해주셨다. 독자적인 예산은 없지만 과학기술이 관여할 수 있는 보건, 국방, 환경, 여성 등 여러 영역을, 여러 부처를 과학기술이 큰 영향을 주고 있고, 사회와 과학기술을 떼 수 없는 만큼 다른 영역은 무엇일지, 과학기술 정책의 관점에서 조언하고 지원할 영역에 대한 고민을 하면 좋겠다. 또한 국가 과학기술의 싱크탱크인 만큼 여러 분야에서 장기적 관점으로 연구원들의 역량을 높이는 일들을 하시면 좋겠다.

정리_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홍보기획팀 이승아 연구원

미국 트럼프 정부의 과학기술혁신 정책 전망 및 우리의 대응 방향

오현환_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



1. 들어가며

2016년 11월 8일,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가 당선되었다. 예상에서 벗어난 결과가 나타나자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의 다가올 정책변화를 예측하느라 분주하다. 그러나 과학기술혁신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는 눈에 띄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지 않다. 이는 선거 과정에서 트럼프 측이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특별한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nature誌는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소식을 전하며 ‘과학자들이 기절’ 했다는 헤드라인으로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을 전했다. 이 기사에서 미국물리학회(American Physical Society) 대변인은 미국 최초의 ‘反과학 대통령(anti-science president)’을 갖게 되었다고 까지 했다.¹ 또한 ‘과학과 反과학의 전쟁’이라는 철학적 문제로 접근하기도 한다.² 과학기술계 변화 방향의 불확실성은 미국 과학자의 걱정과 우려, 불안을 더 확정시키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불안은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 미국의 정치체계가 대통령의 철학, 정견에 따라 크게 변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트럼프 정부도 공화당이 주장해 온 과학기술정책의 범주 안에서 추진될 것이고, ‘강한 미국의 회복’을 위해 민주당 오바마 정부의 정책도 일부 계승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대통령 당선 이후 트럼프에 반대 입장이던 IT업계 대표들을 면담하는 등 선거 당시 정책의 변화 조짐이 보이고 있다.

¹ ‘Donald Trump’s Presidential Election Win Stuns Scientists’, nature, 16.11.9
² ‘Science wars in the age of Donald Trump’, The Conversation, 16.11.16